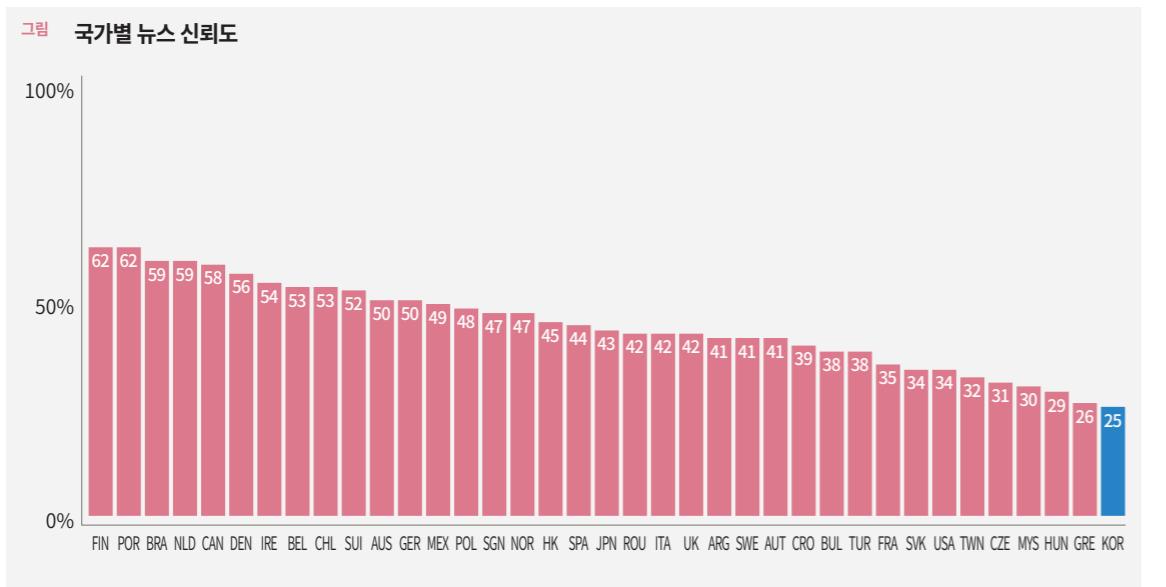


제1분과 토론회 ‘언론 신뢰도 꼴찌, 탈출할 길은 없나?’

한국 언론, 정치권력과 결별하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이해은 /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지원팀 사원



“우리나라 대부분의 뉴스를 거의 항상 신뢰할 수 있다”는 문항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률. 한국은 37개국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출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37개국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언론의 위기의식이 무뎌질 만한 시점에 경종을 울렸다. 언론의 위기의식과 별개로 ‘언론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직속 정책자문기구인 저널리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국민 참여 대토론회를 제안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세 차례에 걸쳐 ‘저널리즘 고취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첫 번째로 열린 ‘언론 신뢰도 꼴찌, 탈출할 길은 없나?’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시민 눈높이 못 맞추는 언론

토론회에는 전·현직 언론인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를 대변하는 이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꼴찌’인 현실을 분석하고, 다양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다. 여러 논의는 결국 ‘시민’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됐다. 언론 신뢰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시민에 복무하라는 요구와 기대는 커졌지만 언론은 권력에만 충실하며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시민의 요구에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든 답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가 제시한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언론사의 존재 이유로서 수용자, 곧 시민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시민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사회를 본다. 언론 신뢰도가 낮은 것은 사회에 대한 신뢰 역시 낮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사회 통합과 발전 측면에서도 언론 신뢰도는 중요하다”라고 언론 신뢰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언론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용자에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며 이용자 측면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낮은 원인으로 가장 먼저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들었다. “언론 매체, 특히 전통 매체의 이용률 급감이 낮은 언론 신뢰의 한 원인일 수 있다”면서도 “미디어 이용률을 신뢰도와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정 매체의 뉴스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현재는 매체 이용률만으로 신뢰도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언론 신뢰도도 낮은 것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판적 언론 수용자가 많으면 신뢰를 낮게 평가하는데, 비판적 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 질문도 할 수 있다”며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김 연구위원은 신뢰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신뢰도 개념의 모호함과 측정의 복잡성을 들었다. 그는 “언론 신뢰도에는 복잡한 심리적인 요인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작동한다. 어떤 대상과 기준으로 측정하는지에 따라 신뢰도 조사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언론 신뢰 또는 신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소셜 플랫폼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저널리즘 신뢰도는 높아지는 추세”라며, “언론 신뢰도에 있어 희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통 매체로의 이용자 회귀와 신뢰도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런 추세를 우리나라 언론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언론 신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사람이 문제인가, 시스템 문제인가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 신뢰가 떨어지는 현상을 후기 근대의 사회적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강 교수는 “후기 근대의 탈진실(Post-Truth) 시대에는 단일한 진실이 아닌 다수의 진실이 존재하면서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혼동이 생긴다. 다양한 차원이 판단의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fact) 차원의 잣대만으로는 뉴스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비제도적 저널리즘이 부상하는 후기 근대 저널리즘 상황에서는 제도적인 저널리즘이 어떻게 비제도적 저널리즘과 공존할 수 있는지와 수용자는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오용 효성그룹 홍보총괄 상임고문은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꼴찌라는 것에 대해 과도한 비하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 신뢰도가 낮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이며, 기대가 높아진 원인으로 독재의 탄압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낸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언론이 인재와 좋은 콘텐츠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언론사로 태어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법, 제도와 같은 강제된 힘이 아니라 사람과 좋은 콘텐츠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사람과 콘텐츠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 언론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언론이 권력에 굽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과거에 독재와 싸운 경험, 민주주의를 구해낸 찬란한 기억들이 아직 국민들에게 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이런 기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 뉴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저널리스트들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질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 저널리스트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갖추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 토론자로 참석한 예비 언론인 백선민 씨는 “언론이 저널리즘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고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언론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언론이 정치·자본권력에만 충실했던 시민의 목소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뢰도 회복 방안에 대해 “언론이 단순한 진실 보도를 넘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제도권 언론과 비제도권 언론이 협업하는 것이 신뢰 회복을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학자인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저널리즘 연속 토론회 첫 번째로 기획된 ‘언론 신뢰도 꼴찌, 탈출한 길은 없나?’ 토론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여러 논의는 결국 ‘시민’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됐다. 시민에 복무하라는 요구와 기대는 커졌지만 언론은 권력에만 충실했으며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제는 ‘시민의 요구에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든 답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가 제시한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었다.”

연구위원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리 신뢰도가 낮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며, “권력에 아부해 퇴출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언론은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치에는 신뢰도 낮은 정치인과 정당을 퇴출하고 양질의 정치인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시스템이 있다. 선순환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언론이 권력에 아부하는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도 문제를 언론 내부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참여와 경쟁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시스템 차원의 해결 방향도 제시했다.

교육·평가 등 외부 자극 필요

사회학자인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한국 언론의 신뢰는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은 현실적으로 정치권력과 결탁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정치 지형이 휘발성과 변동성이 강해 권력이 망할 때마다 정치권력과 언론의 신뢰가 떨어진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신뢰는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다. 언론은 언제나 신뢰를 얻는 것보다 잃는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결국 정치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느냐를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전직 언론인인 정영무 저널리즘위원회 위원은 최근의 여러 언론 보도가 시민들이 보기에 미덥지 않기 때문에 언론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보았다. 또한 상당수 언론사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그 이유로 언론사의 관행, 조직 문화, 물적 토대의 영세성 등 언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들었다. 정 위원은 크게 두 가지의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 혹은 외부 평가였다. 그는 “교육이든 평가든 지속적으로 편집국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 위기에 대한 일련의 논의는 ‘저널리즘을 복원하라’는 결론으로 수렴된다. 사회를 맡은 박영상 저널리즘위원회 위원장 역시 저널리즘 복원이 저널리즘위원회의 궁극적 지향이며, 이번 토론회를 저널리즘 복원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널리즘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시민에 복무하여’ 복원해야 한다는 답을 제시한 자리였다. 모든 발표자들이 공감한 것처럼, 언론 신뢰의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는 없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저널리즘 복원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리였다. ♣